

경제관계장관회의  
26-1-1  
(공개)

모두의 성장을 위한  
대·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

2026. 1. 21.

관계부처합동

# 대·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(요약)

## I 추진배경

- 한미 관세협상, UAE 순방, APEC 등에서 괄목할 경제성과 창출
  - \* 한미 관세협상 타결, 최신 GPU 26만장 확보, 원전·방산 등 해외진출 기반 확대 등
- 대규모 수주·해외진출 등 경제성과는 대기업 자체 노력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 및 정부 지원의 공동 성과

➔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 등 특정 기업을 넘어 **중소·벤처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**시켜, **‘모두의 성장’을 뒷받침**할 필요

☞ “대·중소 상생 성장전략” 마련·추진

\* VIP, “경제외교 성과가 중소기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확산 전략 마련” (제16차 수석·보좌관 회의, '25.11.27)

## II 추진방향

비전

**대·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‘모두의 성장’ 구현**

3대  
방향

- ① 관세협상·순방 등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·확산
- ②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
- ③ 플랫폼·금융·방산 등 상생 생태계 확장

3대 방향	주요 추진과제
1 직접적 성과 공유·확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대·중소기업 대미 투자프로젝트 지원 2배 확대</li> <li>2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·확산</li> <li>3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 1.5조원 이상 조성</li> <li>4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</li> </ol>
2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정부 확보 GPU 중소·스타트업 약 30% 배분</li> <li>2 대기업 지식·기술·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확산</li> <li>3 성과공유제·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확대</li> <li>4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</li> <li>5 기술탈취 기업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</li> </ol>
3 상생 생태계 확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(플랫폼) 동반성장지수 평가 편입 추진</li> <li>2 (금융) 상생금융지수 도입</li> <li>3 (방산)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신설</li> <li>4 (원전) 중소·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</li> <li>5 (기후)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</li> <li>6 (지역·안전) 지역경제·산업안전 상생협력 강화</li> </ol>

### Ⅲ 주요 세부 추진과제

#### 1. 직접적 성과 공유·확산

◇ 대기업 중심의 수주·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개척·진출 확대 및 성장자본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·확산

- (해외 동반진출 ① : 재정지원) 대·중소기업이 對美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동반진출시 정부지원 2배 확대 중기부
  - \* (당초) 대·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, 3년간 최대 10억원 → (확대) 對美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(그 외 15억원) + 보증 200억원 연계
- (해외 동반진출 ② : 금융지원) 수출지원기관(수은, 산은, 무보 등) 수출·수주금융 지원시, 대·중소 협력 프로젝트 우대\* (한도·금리 등) 재경부+금융위+산업부
  - \* 예) 수주·수출 성과의 환류·확산 방안(예: 국내 협력 중소기업체를 통한 현지 설비·자재 공급 등)이 구체화된 대·중소 컨소시엄에 대해 정책 금융지원 한도·금리 우대
- (상생금융 프로그램) 대기업·금융권이 출연하고, 보증기관(산·기보, 무보 등)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 및 확산 (현기차-금융권-협력사 사례: 당초 1조원 → 확대 1.3조원 규모) 산업부+중기부+금융위
  - 포스코인터내셔널 출연(10억원) 및 신보 보증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신설('26.1월~) 금융위
  -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에 출연시, 출연금의 5~10%를 법인세에서 감면\*하는 세액공제 신설 재경부
    - \* 중견기업 지원 목적 5%, 중소기업 지원 목적 10%, '28.12.31까지 (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신·기보 출연금에 대해서는 10% 법인세 既 감면 중)
- (상생협력기금) 향후 5년간('26~'30년) 상생협력기금 1.5조원 이상 조성(연평균 조성규모 : '16~'25년 2,663억원 → '26~'30년 3,000억원 이상) 중기부
- (전략수출금융기금) 대규모 수주를 충분히 지원하고,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'전략수출금융기금' 신설 재경부
  -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·중견 등 생태계로 환류(근거법 제정, '26.上)

## 2.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

◇ **공동 기술개발·협업, 성과공유제·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**

- **(GPU) 정부 확보 GPU(5.2만장) 중 '25년 추경 활용분(약 1만장)을 중소·스타트업에 약 30% 배분 추진(사용료: 시장가격의 약 5~10%)**<sup>과기부</sup>
- **(지식 확산) 정부·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지식·기술·노하우(장비 배치, 경영 기법 등)를 중소기업으로 확산**<sup>중기부</sup>
- **(개방형 혁신) 민관협력형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 지원을 확대('25년 200억원→'26년 242억원)하고, 단계별 성과기반 지원체계\*** 구축<sup>중기부</sup>
  - \* 지원내용 : (매칭)협업 파트너 매칭 → (기술검증)과제해결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(기업당 최대 1.4억원 지원) → (시장검증, 신설)후속 시장검증 지원(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)
- **(성과공유제)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수·위탁 거래에서 플랫폼·유통·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**<sup>중기부</sup>
  - \* (現) 수위탁기업 → (改) 플랫폼, 유통, 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(「상생협력법」 개정, '26.上)
- **(동반성장평가)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134개 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('25년 기준 331개 기관)으로 단계적 확대**<sup>중기부</sup>
- **(중소 협상력 강화)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\***하고, 협상에 필요한 행위(거래조건 협의 등)에 대한 담합 예외 인정<sup>중기부+공정위</sup>
  - \*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과 단체적 계약 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(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개정)
- **(기술탈취 대응 강화) 한국형 증거개시제도\*** 도입,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 대응체계 강화<sup>중기부+공정위+지재처 등</sup>
  - \*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→ 조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
  - 기술탈취 관련 수사·조사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(現 25명) 및 기술보호 감시관\* 도입<sup>지재처+공정위</sup>
  - \*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기계, 전기·전자, 자동차,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
  - 행정제재를 시정명령, 벌점 등으로 확대(現 시정권고만 규정)하고,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(최대 50억원) 도입<sup>중기부</sup>
  - \*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개정('26.下)

### 3. 상생 생태계 확장

◇ 대·중소기업 **상생협력 생태계**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**플랫폼, 금융, 방산, 원전, 기후, 지역·산업안전** 등으로 확장

- ① **(플랫폼)** 배달플랫폼의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검토<sup>공정위</sup>
  -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\* 추진<sup>중기부+동반위</sup>
    - \* 평가대상 : (現) 제조·건설·유통업 등 250개사 → (改) 온라인플랫폼 기업 추가
- ② **(금융)** 금융회사와 中企간 상생을 평가하는 **상생금융지수 도입**(‘26년) 및 **포용·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**을 위한 **자금공급 확대**<sup>금융위+중기부+동반위</sup>
  - \* 중소기업 대출 상위 은행(기업·국민·하나·신한·우리·농협)부터 단계적 확대
  - \*\* 민간금융권 기준 생산적금융 525.5조원(국민성장펀드 투자 52조원), 포용금융 77.5조원
- ③ **(방산)** 방위산업 **상생수준평가**를 신설(‘26년, 비공표)\*하고, **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**\*\*를 마련해 **상생협력 생태계 조성**<sup>방사청+동반위</sup>
  - \* 한화오션, 현대로템,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
  - \*\* 평가 우수기업 대상 방산원가, 절충교역, 이차보전 분야 인센티브 검토
  - 공모형 **획득제도**\* 도입<sup>방사청</sup>, 군·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**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** 및 **실증시험 지원**<sup>중기부+방사청</sup>
    - \* (現) 군이 성능·전력화 시기 등 결정 → (改) 스타트업 등이 성능·획득계획 제안
- ④ **(원전)** 원전 중소·중견기업 공급망 강화 및 **해외진출**을 위한 **컨설팅·인증·마케팅 비용 지원**(‘26년 45.3억원)<sup>산업부</sup>
- ⑤ **(기후)** 대기업-협력업체 **공동 탄소감축 투자**시 **이차보전 지원**\* 확대, 대기업과 중소·스타트업 **개방형 혁신**(‘26년 10개사) 지원<sup>기후부</sup>
  - \*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(환경산업기술원) 이차보전 지원 대출공급 한도액 : (現) 최대 2조원 → (改) 최대 30% 가산(최대 2.6조원)
- ⑥ **(지역·산업안전)** 지방정부의 중소기업·특화산업 지원과제에 대해 **동반위가 대기업 수요 조사 및 매칭 지원**\* + **참여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대**<sup>동반위</sup>
  - \* 시도별 특화산업·전통시장 지원 등 과제 발굴(지방정부) → 대기업 수요 발굴 통해 대기업-지방정부 매칭(동반위) → 대기업-지역 중소기업 협력(동반성장지수 우대)
  - 대·중소기업 **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**을 **건설업 포함 쏠업종**으로 확대<sup>노동부</sup>하고, **동반성장지수 평가 신규 반영** 추진<sup>동반위</sup>

◇ **대통령 주재 「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\***」 신설해 추진과제 점검

\* 중기부-동반위 주관, 10대 그룹 및 협력사, 경제단체·학계, 관계부처 등 참여

# 순서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추진방향 .....	2
III. 세부 추진과제 .....	3
1. 직접적 성과 공유·확산 .....	3
2.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.....	5
3. 상생 생태계 확장 .....	10
IV. 추진계획 .....	12

## I. 추진배경

- 한미 관세협상, UAE 순방, APEC 등에서 괄목할 경제성과 창출
  - 한미 관세협상 타결(對美 자동차·부품 관세 25→15% 인하 등), AI 핵심 자원(최신 GPU) 확보\* 등 통상·공급망 여건 개선
    - \* 최신 GPU 26만장(정부5만장, 네이버6만장, 삼성전자5만장, SK5만장, 현대차5만장) 확보(APEC)
  - 원전·방산 등 해외진출 기반 확대\* 및 수주 성과\*\*도 거양
    - \* 원전·방산·첨단산업·K-컬처 4개 분야 전방위 경제협력 강화(UAE 순방)
    - \*\* 5.6조원 규모 천무 유도 미사일 3차 공급계약 체결(폴란드)
- 대규모 수주·해외진출 등 경제성과는 대기업 자체 노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협력업체 및 정부 지원의 공동 성과

➔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 등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기업·벤처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시켜, '모두의 성장'을 뒷받침할 필요

\* VIP, "경제외교 성과가 중소기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확산 전략 마련"  
(제16차 수석·보좌관 회의, '25.11.27)

- 대·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\*에도 불구하고, 실질적 성과 확산 및 생태계 고도화에는 한계 노출

\* 「상생협력법」 제정('06년), 동반위원회 설치('10년),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('23년) 등

① 순방 등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기업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한계

② 대기업의 해외 현지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기업 납품구조 변동\*, 中企 기술탈취\*\* 등에 따른 대→중소기업 성과 확산 경로 약화

\* 조달경로의 국내→해외(현지 협력사) 대체, 공동 R&D·협업 등 협력 기회 축소 등

\*\* 年 약 300건, 평균 손실액 18억원 추정(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, '24년)

③ 기존 상생협력 생태계가 제조업 중심\*으로 구축되어, 플랫폼·금융·방산·기후 등 경제 전반으로의 확산 미흡

\* 업종별 상생협력기금 출연 비중(%) : (제조) 51.0 (건설) 9.1 (유통) 8.9 (IT) 3.3 등

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'모두의 성장'을 위한 "대·중소 상생 성장전략" 마련·추진

## II. 추진방향

비전

대·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 
‘모두의 성장’ 구현

3대  
방향

- ① 관세협상·순방 등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·확산
- ②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
- ③ 플랫폼·금융·방산 등 상생 생태계 확장

3대 방향	주요 추진과제
1 직접적 성과 공유·확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대·중소기업 대미 투자프로젝트 지원 2배 확대</li> <li>2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·확산</li> <li>3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 1.5조원 이상 조성</li> <li>4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</li> </ol>
2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정부 확보 GPU 중소·스타트업 약 30% 배분</li> <li>2 대기업 지식·기술·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확산</li> <li>3 성과공유제·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확대</li> <li>4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</li> <li>5 기술탈취 기업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</li> </ol>
3 상생 생태계 확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(플랫폼) 동반성장지수 평가 편입 추진</li> <li>2 (금융) 상생금융지수 도입</li> <li>3 (방산)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신설</li> <li>4 (원전) 중소·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</li> <li>5 (기후)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</li> <li>6 (지역·안전) 지역경제·산업안전 상생협력 강화</li> </ol>

### 【 주요 기대효과 】

- ◇ 상생 생태계 : 제조 중심 → 플랫폼, 방산, 금융 등 확장
- ◇ 상생협력기금 : '16~'25년 2,663억원 → '16~'30년 3,000억원
- ◇ 상생금융 : '25년 1조원 → '26년 1.7조원+a(지속 발굴·확산)
- ◇ 상생결제 : '25년 189조원 → '30년 230조원
- ◇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: '24년 49점 → '30년 65점(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)

### Ⅲ. 세부 추진과제

#### 1 직접적 성과 공유·확산

◇ 대기업 중심의 수주·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개척·진출 확대 및 성장자본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·확산

#### ① [동반진출] 수주·수출 성과를 中企 해외개척·진출 기회로 활용

- (해외 동반진출 ① : 재정지원) 대·중소기업이 對美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동반진출시 정부지원 2배 확대 중기부
  - \* (당초) 대·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, 3년간 최대 10억원 → (확대) 對美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(그 외 15억원) + 보증 200억원 연계
- (해외 동반진출 ② : 금융지원) 수출지원기관(수은, 산은, 무보 등) 수출·수주금융 지원시, 대·중소 협력 프로젝트 우대\* (한도·금리 등) 재경부+금융위+산업부
  - \* 예) 수주·수출 성과의 환류·확산 방안(예: 국내 협력 중소기업체를 통한 현지 설비·자재 공급 등)이 구체화된 대·중소 컨소시엄에 대해 정책 금융지원 한도·금리 우대
- (글로벌 공급망) 대기업 현지진출 확대 등에 대응해 협력업체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지원하고, 공급망 장벽 대응 역량 강화 산업부+방사청 등
  - 방산 등 분야 협력업체 글로벌 인증(수출대상국 요구 규격·인증 등) 획득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방사청
  - \* 예) GVC 30 프로젝트 사업 :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분석을 통해 국내 방산 분야 중소기업 실증시험, 해외 마케팅 등 공급망 지원(26년 301억원)
  -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을 선정(200개, ~30년)해 현지진출·M&A 등 패키지 지원\*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도약 지원 산업부
  - \* IP 해외출원 비용 지원, 컨설팅, 현지 법률 검토 등 현지진출 패키지 지원, 미래차 부품기업 M&A 자금지원(인수금액의 최대 60%, 200억원 한도) 등

- 글로벌 공급망 장벽(예: EU 공급망 실사지침\* 등) 대응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(Data Space) 구축\*\* 추진(~28년) 산업부

\* EU 진출기업에 공급망 전반(협력사 포함)에 걸쳐 인권·환경 실사 의무 부과  
→ EU 진출기업 국내 협력사의 실사 대응 부담 발생

\*\* 중소·중견 협력업체가 Data Space에 인권·환경 실사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면  
원청사(대기업) 플랫폼에 데이터가 자동 연동·제공 → 협력업체 실사 부담 경감

**② [상생금융] 대기업 기여 등을 활용해 생태계에 성장자본 공급**

- (상생금융 프로그램) 대기업·금융권이 출연하고, 보증기관(산·기보, 무보 등)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 및 확산  
(현기차-금융권-협력사 사례: 당초 1조원 → 확대 1.3조원 규모) 산업부+중기부+금융위

**현기차-금융권 상생금융 프로그램**

<b>저금리 대출</b> (2,00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신보) 국민銀 50억원 출연 × 20배수 = 1,000억원</li> <li>▶ (기보) 현대차 50억원 출연 × 20배수 = 1,000억원</li> </ul>
<b>보증서 발급</b> (8,70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신보) 현대차·금융권 160원 출연 × 15배수 = 2,400억원</li> <li>▶ (무보) 우리銀 215억원 출연 × 20배수 = 4,300억원</li> <li>▶ (무보) 현대차 100억원 출연 × 20배수 = 2,000억원</li> </ul>
<b>회사채 발행</b> (2,25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신보) 현대차 70억원 출연 × 32배수 = 2,250억원</li> </ul>

- 포스코인터내셔널 출연(10억원) 및 신보 보증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신설(26.1월~) 금융위
- 포스코(50억원)·기업은행(150억원) 출연 및 무보 보증을 통해 4,000억원 규모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 공급(26.1월~) 금융위+산업부
-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에 출연시, 출연금의 5~10%를 법인세에서 감면\*하는 세액공제 신설 재경부

\* 중견기업 지원 목적 5%, 중소기업 지원 목적 10%, '28.12.31까지  
(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신·기보 출연금에 대해서는 10% 법인세 既 감면 중)

- **(상생협력기금)** 향후 5년간('26~'30년) 상생협력기금 1.5조원 이상 조성(연평균 조성규모 : '16~'25년 2,663억원 → '26~'30년 3,000억원 이상) 중기부
- **상생협력기금 출연 유도를 위해,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\*하고, 금융회사, 방산 체계기업(대기업) 등에 인센티브 등\*\* 부여** 중기부+방사청
  - \* 상생협력기금 전체 집행액 중 정부매칭 사업(상생협력기금→정책사업 출연시,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) 비중 확대 : ('24년) 14% → ('30년) 20%
  - \*\* 예) 상생금융지수 평가시 우대, 방산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·증가율을 상생수준평가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 등 검토
- **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지원 용도를 기존 협력사 위주에서 非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** 중기부
  - \* (現) 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(관)(민간, 공공)이 지원용도·대상 지정(협력사 위주로 지원) → (改) 상생협력기금 내 공동협력사업(非협력사 스마트제조AX, 소상공인 등 지원)을 신설하고, 지원대상 중소기업·소상공인은 공모를 통해 선정
- **(전략수출금융기금)** 대규모 수주를 충분히 지원하고,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'전략수출금융기금' 신설 재경부
- **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·중견 등 생태계로 환류**(근거법 제정, '26.上)
 

- ▶ (재원) 정부 출연·보증 + 정책금융기관 출연 + 수혜기업 기여금 + 정부납부 기술료
  - ▶ (운용) 대규모, 장기·저신용 수출금융(대출·보증) + 수출기업 등에 대한 투자

## 2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

◇ **공동 기술개발·협업, 성과공유제·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**

### 1 [공동 기술개발·협업] 지속 가능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

- **(GPU) 정부 확보 GPU(5.2만장) 중 '25년 추경 활용분(약 1만장)을 중소·스타트업에 약 30% 배분 추진**(사용료: 시장가격의 약 5~10%) 과기부
- **정부 GPU 공급(GPU 확보사업,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) 과기부 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(AI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) 간 연계 과기부+중기부 추진**
  - \* 정부 확보 GPU 중소·스타트업에 배분, 국가 AI 컴퓨팅센터 중소·스타트업 활용 촉진 등

- **(지식 확산)** 정부·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지식·기술·노하우(장비 배치, 경영 기법 등)를 중소기업으로 확산<sup>\*중기부</sup>
  - \* (現) 상생협력기금으로 상생형 스마트공장, 안전보건, 상생 ESG 등 민관 공동 전략 등으로 개별 사업에 특정된 지식 공유에 국한 → (改) 상생협력기금에 지식확산형을 신설하여 장비 배치, 경영 기법 등 일반 지식의 확산 촉진
- **(스마트공장)** 대기업·공기업을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\* 확대('25년 340억원→'26년 400억원)<sup>중기부</sup>
  - \* 대기업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중소·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,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(기업당 최대 1.2억원 한도)
  - **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**('25년 8개사 → '26년 20개사) 및 **국비분담 지원 확대**<sup>\*중기부</sup>
    - \*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비 분담률(% 정부대기업중소기업) : (일반형) 30:30:40 (AI분야) 50:20:30
  - **대·중견·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제조 AI를 개발·현장 적용하는 대·중견·중소 협력 AI 팩토리 구축**(100개, ~'30년)<sup>산업부</sup>
- **(개방형 혁신)** 민관협력형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 지원을 확대('25년 200억원→'26년 242억원)하고, 단계별 성과기반 지원체계\* 구축<sup>중기부</sup>
  - \* 지원내용 : (매칭)협업 파트너 매칭 → (기술검증)과제해결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(기업당 최대1.4억원 지원) → (시장검증, 신설)후속 시장검증 지원(기업당 최대2억원 지원)
- **(인력양성)** 대기업 AI 인프라·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\* 신설('26년 2,000명 양성 목표)<sup>노동부</sup>
  - \* '26년 예산 100억원(20개소 공동훈련센터 지정 × 개소당 100명 양성 계획)
  - 청년 구직자 취업역량 제고 및 협력 중소기업에의 취업연계 강화를 위해 대·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사업 확대\* 추진<sup>중기부</sup>
    - \* 대·중견기업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 실시, 협력 중소기업 취업 연계('26년 30억원)
      - ↳ ('25) LG CNS, 포스코 등 13개 → ('26)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 등 확대 추진
- **(공동 R&D)** 중견기업과 중소기업(2개 이상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R&D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확대<sup>\*산업부</sup>
  - \* '25년 156억원(5개 과제) → '26년 252억원(15개 과제)
  - 중견·중소 컨소시엄 내 환류 경로 강화를 위해 **현금배분, 물량확대 등 성과공유계약 의무화**(이행여부 점검 및 평가 등)<sup>산업부</sup>

- **(데이터)** 대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**데이터 바우처\*** 지원('26년 94억원)<sup>과기부</sup>
  - \* 데이터 공급기업(대기업 등)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구매·가공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(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)

## ② **(상생협력 기반 강화) 대→중소기업 성과 환류 생태계 기반 강화**

- **(성과공유제)**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수·위탁 거래에서 플랫폼·유통·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<sup>중기부</sup>
  - \* (現) 수위탁기업 → (改) 플랫폼, 유통, 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(「상생협력법」 개정, '26.5)
- 성과공유 유형\* 중 현금·현금성 공유(지식재산권 공유 등)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우대·개선<sup>\*\*중기부</sup>
  - \* ①현금 공유, ②현금성 공유(지식재산권 공유 등), ③물량 확대
  - \*\* (現) [현금·현금성]공유 금액만 인정 + [물량확대]발주계약 금액 전체 인정 → (改) [현금·현금성]공유 금액 2배 인정 + [물량확대]신제품·신기술 개발에 한해 위탁 기업이 발주한 금액만 인정, 그 외(단가절감, 성능개선 등)는 현금 공유액만 인정
- **(상생결제)** 상생결제 지급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공공 하도급 계약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<sup>공정위+국토부+중기부 등</sup>
  -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\*(0.15~0.5%) 일몰 연장('25년→'28년)<sup>재경부</sup>
    - \* 상생결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의 0.15~0.5%를 법인세에서 공제(최대 10%)
      - ※ 세액공제율(%) : (15일 이내 지급) 0.5 (16~30일) 0.3 (31~60일) 0.15
  -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 상생결제 지급에 대한 정량평가(0.3점) 반영<sup>행안부</sup>
  - 공공 하도급(건설·제조·용역)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제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단계적 의무화<sup>\*공정위+국토부 등</sup>
    - \* (現) 공공 건설 하도급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(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) → (改) 건설 포함 제조·용역 분야 공공 하도급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
- **(동반성장평가)**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 우수기업(관)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동반성장평가 내실화 추진<sup>중기부+동반위</sup>
  - 금융·플랫폼·방산 등 특화분야 지수 산정·발표<sup>\*동반위</sup>
    - \* (現) 동반위 평가(50%)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(50%)를 합산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 → (改) 금융위(금융), 방사청(방산) 등 협업을 통해 특화분야 별도 개발·산정

-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·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방안\* 마련 중기부+동반위
  - \* (現) 수·위탁 실태조사 및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,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
-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134개 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('25년 기준 331개 기관)으로 단계적 확대 \*중기부
  - \* (現) 공기업 전체 31개, 준정부기관 전체 57개, 기타공공기관 46개 대상 실시  
→ (改) 기타공공기관 평가대상 선정기준 마련('26년) 후 단계적 확대(~'30년)
-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동반성장평가 반영 지표 배점 확대 \*재경부
  - \* 공기업(SOC·에너지) 1.5→2점 / 공기업(산업진흥·서비스) 2→2.5점 / 준정부기관 1→1.5점
- **(납품대금연동제)**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(전기·연료 등) 경비까지 확대 \*중기부+공정위
  - \* 「상생협력법」 본회의 통과('25.11.13, '26.12월 시행), 「하도급법」 법사위 통과('25.12.3)
-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수·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 중기부
- **(피해구제기금)**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·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구제기금\* 설치 방안 마련 ('26.上) 공정위+중기부
  - \* (재원)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(年 5,000억원 수준) 일부(20% 이내) (용도) 소송지원, 분쟁조정지원, 자금지원,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 등
- **(중소 협상력 강화)**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\*하고, 협상에 필요한 행위(거래조건 협의 등)에 대한 담합 예외 인정 중기부+공정위
  - \*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과 단체적 계약 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(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개정)
- **(사회연대경제)** 대기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(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) 간 협력사업 발굴, 사회연대경제조직 물품 우선구매 등 상생협력 지원 행안부
- 사회연대경제 민간기금\*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독려
  - \* 법인·기업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투·융자 지원, 사회가치 창출 목적의 자금공급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금

### ③ [기술탈취 근절] 대응체계 강화 및 행정처벌·제재 강화

- **(대응체계)** 한국형 증거개시제도\* 도입,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 대응체계 강화 중기부+공정위+지재처 등
    - \*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→ 조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
  - 중소기업 관련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기술탈취 합동 대응단\* 구성·운영('26.1월) 중기부+공정위+지재처 등
    - \*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추진
  - 「IP 법률지원단」을 신설\*(‘26.下)해 초기 분쟁대응(경고장 발송 등) 부터 심판·소송 대리, 분쟁조정 등 통합 지원 지재처
    - \* 「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법」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
- **(손해배상 현실화)**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(최대 5배)의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\* 중기부
  - \*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손해 배상액 산정시 반영, 손해액 산정 가이드 마련·배포
- **(수사·조사 강화)**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(現 25명), 수사·조사기관 대상 기술자문 제공 지재처
  - 기술보호 감시관\* 제도 도입·운영 및 익명제보 활성화 공정위
    - \*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기계, 전기·전자, 자동차,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 → 불법행위 정보 수집
- **(제재 강화)**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 중기부+공정위
  - 행정제재를 시정명령, 벌점 등으로 확대(現 시정권고만 규정)하고,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(최대 50억원) 도입 중기부
    - \*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개정('26.下)
  - 기술탈취 빈발 업종(기계, 차부품 등) 직권조사 강화(연 2→3회) 공정위

## 3

## 상생 생태계 확장

◇ 대·중소기업 **상생협력 생태계**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**플랫폼, 금융, 방산, 원전, 기후, 지역·산업안전** 등으로 확장

- ① **(플랫폼)**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(최혜대우요구 등)에 엄정 대응하고,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검토<sup>공정위</sup>
  -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\* 추진<sup>중기부+동반위</sup>
    - \* 평가대상 : (現) 제조·건설·유통업 등 250개사 → (改) 온라인플랫폼 기업 추가
- ② **(금융)**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상생을 평가하는 **상생금융지수 도입**<sup>(26년)</sup> 및 **포용·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**을 위한 **자금공급 확대**<sup>금융위+중기부+동반위</sup>
  - \* (평가대상) 중소기업 대출 상위 은행(기업·국민·하나·신한·우리·농협)부터 단계적 확대 (추진일정) 평가지표 마련(~'26.上) → 시범 평가('26.下) → 본 평가('27)
  - \*\* 민간금융권 생산적금융 525.5조원(국민성장펀드 투자 52조원), 포용금융 77.5조원
- ③ **(방산)** 체계기업(대기업)과 방산 스타트업간 **협업 촉진**<sup>방사청+중기부</sup>
  -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를 신설<sup>(26년, 비공표)\*</sup>하고,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<sup>\*\*</sup>를 마련해 **상생협력 생태계 조성**<sup>방사청+동반위</sup>
    - \* 한화오션, 현대로템,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
    - \*\* 평가 우수기업 대상 방산원가, 절충교역, 이차보전 분야 인센티브 검토
  - 공모형 획득제도<sup>\*</sup> 도입<sup>방사청</sup>, 군·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실증시험 지원<sup>중기부+방사청</sup>
    - \* (現) 군이 성능·전력화 시기 등 결정 → (改) 스타트업 등이 성능·획득계획 제안
- ④ **(원전)** 원전 중소·중견기업 공급망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**컨설팅·인증·마케팅 비용 지원**<sup>(26년 45.3억원)</sup><sup>산업부</sup>

- 美, 튀르키예 등 원전 수주 유망국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 공급사와 B2B 미팅 지원<sup>산업부</sup>

## ⑤ (기후) 대기업-협력업체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<sup>\*기후부</sup>

\*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(환경산업기술원) 이차보전 지원 대출공급 한도액 : (現) 최대 2조원 → (改) 최대 30% 가산(최대 2.6조원)

- 중소·스타트업 등의 기술·아이디어를 대기업의 탄소감축 문제에 활용(개방형 혁신, '26년 10개사)<sup>기후부</sup>

- 대·중소기업 녹색수출 원팀 체계\*를 가동해 대기업 해외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하는 패키지형 수주모델 구축<sup>기후부</sup>

\*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구성·출범('23.1월), 74개 기관 참여 중

## ⑥ (지역·산업안전)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안전 관련 상생협력 강화<sup>노동부·동반위</sup>

- 지방정부의 중소기업·특화산업 지원과제에 대해 동반위가 대기업 수요 조사 및 매칭 지원\* + 참여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대<sup>\*\*동반위</sup>

\* 시도별 특화산업·전통시장 지원 등 과제 발굴(지방정부) → 대기업 수요 발굴 통해 대기업-지방정부 매칭(동반위) → 대기업-지역 중소기업 협력(동반성장지수 우대)

\*\* 지역사회 동반성장 배점 확대(현행 1점) 등 우대방안 검토

-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\*을 건설업 포함 쏠업종으로 확대<sup>\*\*노동부</sup>하고, 동반성장지수 평가 신규 반영 추진<sup>동반위</sup>

\* 모기업(100인 이상)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시 정부가 50~70% 매칭 지원

\*\* (現) 건설업 제외 모든 업종 지원 중 → (改) '26년부터 5개 종합건설사 및 50여개 협력업체 대상으로 시범 운용 후 확대 검토

### ◆ 대통령 주재 「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\*」 신설해 추진과제 점검

\* 중기부-동반위 주관, 10대 그룹 및 협력사, 경제단체·학계, 관계부처 등 참여

## IV. 추진계획

정책 과제	추진시기	부처·기관
-------	------	-------

### 1. 직접적 성과 공유·확산

▶ 대·중소 對美 동반진출시 정부지원 2배 확대	'26.	중기부
▶ 수출·수주금융 지원시, 대·중소 협력 프로젝트 우대	계속	재경부, 금융위, 산업부
▶ 중소·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 구축 추진(~'28년)	'26.1/4~	산업부
▶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·확산	'26.~	산업부, 중기부, 금융위
▶ 상생협력을 위한 무보 출연금 법인세 5~10% 감면	'26.1~	재경부
▶ 상생협력기금 향후 5년간 1.5조원 이상 조성	'26.~'30.	중기부
▶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(근거법 제정)	'26.2/4~	재경부

### 2.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

▶ 정부 확보 GPU(5.2만장) 중 '25년 추경 활용분(약 1만장)을 중소·스타트업에 약 30% 배분 추진	'26.1/4~	과기부
▶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 및 국비분담 지원 확대	'26.	중기부
▶ 대·중견·중소 협력 AI 팩토리 구축(100개, ~'30년)	'26.~'30.	산업부
▶ 민관협력형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 지원 확대	'26.	중기부
▶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('26년 2,000명 양성 목표)	'26.~	노동부
▶ 대·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	'26.	중기부
▶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확대	'26.	산업부
▶ 중소기업·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	'26.	과기부
▶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 ('상생협력법' 개정)	'26.上	중기부
▶ 성과공유 유형 중 현금·현금성 공유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우대·개선	'26.1/4~	중기부
▶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0.15~0.5%) 일몰 연장('25년→'28년)	'26.1~	재경부
▶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생결제 지급 정량평가(0.3점) 반영	'26.下	행안부
▶ 공공 하도급(건설·제조·용역)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제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단계적 의무화	'26.~	공정위, 국토부 등
▶ 금융·플랫폼·방산 등 특화분야 지수 산정·발표	'26.~	동반위
▶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·중견기업 실질적 우대방안 마련	'26.~	중기부, 동반위

▶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(現 134개) 단계적 확대	'26.~	중기부
▶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동반성장평가 반영 지표 배점 확대	'25.9	재경부
▶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	'26.12~	중기부, 공정위
▶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 수위탁 직원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	'26.1/4~	중기부
▶ 피해구제기금 설치방안 마련	'26.上	공정위, 중기부
▶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및 협상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담합 예외 인정(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개정)	'27.上	중기부, 공정위
▶ 대기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사업 발굴 등	'26.	행안부
▶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(「상생협력법」('26.上), 「하도급법」('26.下) 등 개정)	'26.上~	중기부, 공정위, 지재처
▶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(「상생협력법」('26.上), 「하도급법」('26.下) 등 개정)	'26.上~	중기부, 공정위
▶ IP 법률지원단 신설	'26.下	지재처
▶ 손해배상액 산정시 기술개발 투입 비용도 반영	'26.下	중기부
▶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(現 25명) 확충	'26.~	지재처
▶ 행정제재 확대(現 시정권고→ 改 시정명령, 벌점 등) 및 중대 위법행위 대상 대규모 과징금(최대 50억원) 도입 (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개정)	'26.下	중기부

### 3. 플랫폼·금융·방산 등 상생 생태계 확장

▶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추진	'26.	중기부, 동반위
▶ 상생금융지수 도입	'26.	금융위, 중기부, 동반위
▶ 포용·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	'26.	금융위
▶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신설 및 상생수준별 인센티브 마련	'26.3/4	방사청, 동반위
▶ 공모형 획득제도 도입	'26.下~	방사청
▶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실증시험 지원	'26.	중기부, 방사청
▶ 원전 중소·중견기업 공급망 강화 및 해외진출 컨설팅·인증·마케팅 비용 지원	'26.	산업부
▶ 대기업 협력업체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	'26.	기후부
▶ 대·중소기업 녹색수출 원팀 체계 가동	'26.	기후부
▶ 지방정부의 중소기업·특화산업 지원과제에 대해 동반위가 대기업 수요 조사 및 매칭 지원 + 참여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대	'26.1/4~	동반위
▶ 대·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건설업 포함 소업종으로 확대 + 동반성장지수 평가 신규 반영	'26.1/4~	노동부, 동반위